

青·情·政 고위사절단 오늘 방북… 김정은 만날까

(청와대·국정원·정부)

정의용 등 특별기로 1박2일 간 한반도 비핵화·북·미 대화 논의 귀환 후 美방문… 결과 설명키로



비핵화 북미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5일 오전 방북 한다. 특별사절단은 수석 특별사절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으로 꾸려졌다. /연합뉴스

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절단 방북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윤 수석은 “사절단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6일 오후 귀환하는 사절단은 귀국 보고를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해 미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율리 중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특별사절단에 장관급 인사 두 명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절단이 갖는 무게감이 육중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의용 실장은 대미통, 서훈 국정원장은 대북통으로 함께 대북 협상을 원활하게 이끄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대미 소통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라는 판단 때 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원장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 협상에 깊숙이 관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특별사절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하면서 경험이 풍부한 명실상부한 대북 전략통으로 꼽힌다. 특히 서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정 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안보 핵심라인과 직접 소

통이 가능한 인물로, 대북 협상 결과를 토대로 백악관과 공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각각 만날 때 배석했던 인물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절단 수석을 정 실장이 맡은 것에 대해선 “어느 분이 수석 이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남북관계와 북미대화라는 투트랙을 잘 성사할 수 있는 분들이 이번 대표단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일 방북하는 사절단이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 사전 조율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여정 방남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났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 했다. 다만 사절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면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與 ‘文 정부 힘 실어주기’ vs 野 ‘보수층 결집·정권 심판’

6·13 지방선거 D-100

文 정부 2년차… 본격 선거전 돌입
바른미래 ‘중도·대안’ 이미지 부각

6·13지방선거가 5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진행되는 선거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힘 실어주기’를, 야당은 ‘정권 심판’ 등을 강조하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뒷받침’을 공통 공약으로 지역별 공약을 마련해 유권자의 마음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선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확실한 ‘압도적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경기·광주·세종·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1일 앞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직녀광장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방선거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 광역단체장 선거 지역에서 승리를 하고, 경남·부산·울산 등 기존 보수정당 강세 지역에서도 최소 1곳 이상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도 중앙당 전략 공천위원회와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렸으며, 이번 주 지방선거기획단을 선거대책본

부로 확대·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흩어진 보수층 결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 총력을 펼치는 지역 전략을 강화해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지역구를 석권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천 일정을 확정했으며, 험진 규 정책위원회 의장 중심으로 한 공약개발단을 운영해 지역 맞춤형 공약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단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 임금 정책,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외교·안보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에서 분리된 민주평화당도 ‘신(新) 4당체제’ 준폐를 가르는 이번 선거에 총력전을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중도·대안’ 정당으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지역적으로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호남 지역을,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영남 지역을 맡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호남 지역의 경우 현장지역 행보를 넓히고 있고,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전략’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각 정당들이 지방선거 본격 레이스를 시작했지만, 선거구 확정 등 제도적 준비는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확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지연 처리하면서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본회의 의결이 무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한 지방선거에 차질이 생긴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이었던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와 최근 외교·안보 현안들을 정치권에서 지방선거와 연계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선거도 정책선거가 아닌 소모적 정쟁 속 ‘편 가르기 선거’가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경선 승리가 본선 승리” 與 지방선거 열기 후끈

수도권·부울경 민주당후보 평균 5명
위반·부정·부당행위 엄정단속 예고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높은 지지율 속에 고무적인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과열 경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선거의 성격상, 대통령·당 지지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으로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라는 말이 나온

정도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당들과는 반대로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여왔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민주당 소속 후보자 평균 5명 이상이 언급되는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본선이 시작되면 야당의 ‘정권 심판론’ 공세가 강화될 텐데 이러한 공세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후보자가 많으면 그 안에서 더욱 경쟁력 있고, 좋은 후보를 발굴하는데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과열양상을 떨 경우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맞게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101일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직원들이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을 이용해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지난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과 전남도당 당원 당비 대납 의혹 등으로 이미 흥역을 앓은 바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치열해진 경쟁으로 비위행위가 발생하거나 후보자

간 고소·고발전(戰)이 이어질 경우 지지율이 하락하고, 유권자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윤리 심판원에 회부하거나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등 방침을 이춘석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경쟁과열 지역에 대해 전략공천·조기경선·국민참여경선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경선률을 깨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더욱 기중되는 모습이다.

/이창원 기자